

Left21.com

제93호 | 2012년 11월 19일 ~ 12월 2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흔들리기 시작한 정몽구

한진 해고자 92명 복직

학교비정규직 1차 파업 성공...

▶ 관련 기사 4 ~ 6면

투쟁하고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

23개국 노동자의 파업 · 시위가
유럽을 뒤흔들다!

관련 기사 3면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4대강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났을 것”

낮 뜨거운 이명박의 지화자찬

“화살 1백 발을 쏘서 그중 한 개가 맞으면 맞는 것”

새누리당 관계자.

야당 후보에 대한 무차별 폭로를 시작하며

“꽃 중의 꽃 근혜님 꽃, 별 중의 별 근혜님 별, 8천만의 마음에 영원히 빛난다.”

대구한의대 명예교수 광형식의 ‘근혜어천가’

“집에다가 압류를 1백억~2백억을 걸어 봐요. 애가(노조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이거(민경윤 지부장) 죽여야 된다는 얘기지 ... 이 XX를, 이거는 내가 잡아 죽일 테니까.”

‘교양’ 넘치는 현대그룹 사장단의 ‘노조 파괴 작전회의’

“막말로 돈 2억~3억, 5억, 7억 이판거 가지고 뭐해.”

몇 억 원은 돈도 아니라는

현대그룹 사장단의 실세

“세상이 시끄러우면 <PD수첩>은 조용해야 한다. 세상이 조용하면 <PD수첩>은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MBC 김재철이 임명한 <PD수첩> 부장의 망언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걸 자기 당선 기원 절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박근혜 집 앞에서 매일 3천 배 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

“국민을 마치 ‘흥어X’ 정도로 생각하는 것”

새누리당 김태호, 너희들 생각이 그렇겠지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안 아무개를 뽑는 것은 민주에 대한 역적이고 정의에 대한 배반 ... [부산 출신들이] 여기서 표를 또 얻으면 우리를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이젠 호남에서도 지역주의 선동하는 새누리당

“검 · 경 갈등은 긍정적 기능도 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

서로 비리를 들춰 적발하니까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는 12월 3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인천 주안역 남광장 오후 6:40~7:4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오전 11:45~12:45

고려대(인암) 정경대 후문 오후 1:00~2:00

한국외대(서울) 인문관 앞 오후 12:30~1:30

격주 화요일 (다음호는 12월 4일)

서울 강남역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오전 11:50~12:5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오후 12:00~1: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오전 11:30~12:30

수요일 (다음호는 12월 5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목요일 (다음호는 12월 6일)

충남대 공대2호관 앞(쑈문) 오후 12:30~1:3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 시도

정의와 평화를 철거하려는 짓거리를 멈춰라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서울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구청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달 말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경찰은 “철거 후에도 일정 병력을 상주시켜 다시 불법 천막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문 앞 농성장은 슬라보예 지젝 등 세계적 석학이 찾아와 지지와 연대를 밝히기도 했고 문재인, 안철수도 방문했을 만큼 쌍용차 투쟁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또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이곳에서 40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활동가들과 용산 참사 유가족들, 반핵 운동 단체들은 11월 12일부터 쌍용차 농성장 옆에 ‘함께살자 농성촌’을 꾸렸다. 그리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의 연대의 장,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공동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이 곳은 정의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지지해 마땅한 희망과 연대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여친과 덕수궁 데이트하다가 이거 보고 기겁”이라는 수준 이하의 제목으로 연일 농성촌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명



희망과 연대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의 쌍용차 분양소.

소”인 대한문 앞에 “전국구 시위꾼”들이 “불법 농성촌”을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대한문 앞 분양소는 법원도 인정한 곳인데 말이다.

그동안 감히 농성장을 건드리지 못하던 경찰과 새누리당 소속 중구청장도 우파 언론들의 비난 장단에 맞춰 철거를 발

표하며 농성촌을 협박하고 나섰다.

우파 언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를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파와 조종당은 최근 들어 현대차 철탑 농성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등이 사회적 연대를 모으고,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등 노동자 투쟁을 향한

신물나는 ‘묻지마 파병 연장’ 중단하라!

반전평화연대(준)가 파병연장안 국방위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축하해 심는다.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위에 소속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에도 ‘묻지마 파병’에 또 손을 들어 줬다. 아프가니스탄·아랍에미리트(UAE)·소말리아 한국군 파병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이 또 통과된 것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에 10년 넘게 반복되어 온 ‘묻지마 파병연장’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번 파병재연장에도 정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첫째, UAE 파견연장 명분은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이다. 그런

데 UAE 현지 군대에 대한 교육훈련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지난해 3월에는 바레인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바레인 왕정 보호를 위해 사우디군 1천 명, UAE 경찰 5백 명을 파병했는데, 이 경찰 훈련을 바로 아크부대가 해 왔다는 게 밝혀졌다. 한마디로 UAE 파병 부대 연장은 중동 평화를 해치는 효과만을 낼 뿐이다.

둘째 “2014년 완전 철군”이 합의됐고 “실패한 전쟁”임이 판명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올해 안에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터에 왜 한국군대만이 유독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가. 아프가니스탄 점령 군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쉬노 부

대의 파견이 연장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무를 연장하게 될 오쉬노 부대는 점령군의 식민지 맞춤형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건팀 경계를 위해 언제 떨어질지 모를 로켓포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파견연장도 정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경우 “선박 및 선원 보호”를 거론했다. 그러나 해군의 강력 대응은 해적 행위의 위험성을 높일 뿐이다. ‘아덴만의 여명’ 같은 작전 이후 한국 선원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았다. 무엇보다 ‘파병을 통한 선박 보호’라는 논리는 소말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해적 행위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소말리아 앞바다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통로다. 미국은 이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국은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과 헤즈볼라가 연계돼 있다면서 소말리아에 2007년부터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다.

국방위를 통과한 파견연장동의안이 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치게 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는 국제평화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입증시키는 결과만 될 뿐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묻지마 파병연장을 부결시켜라!

국제평화 위협하는 파병연장동의안 결사 반대한다!

2012년 11월 15일 반전평화연대(준)

내곡동은 덮고 진보진영에 더러운 칼 찔러대는 검찰

검찰이 지난 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벌인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투표에 참여한 1만 3천 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 중 1천7백35명을 구속하고 20명을 기소하고 4백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상 유례없는 공안수사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에 수박 겉핥기만 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검찰은 엄연히 보장된 권리인 진술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명백히 진보정당에 대한 이중잣대다. 전당대회에서 한 돈 봉투 살포가 “관례”라는 새누리당 박희태는 겨우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이고 기성 정당의 돈 공천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다.

반면 경찰과 조종당은 ‘종북좌파’에 ‘부패’ 이미지까지 덧씌워 마녀사냥을 하면

서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강제 침탈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검 공안부장 임정혁은 뻔뻔하게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며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검 · 경 갈등에서 드러났듯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검찰은 조사를 벌일 자격이 없다.

통진당 경선 부정 문제는 검찰의 더러운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보진영 스스로가 진보의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야 할 문제일 뿐이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문제를 계속 들쭉시며 진보진영 전체에 부패하다는 인상을 덧씌우고 우파나 좌파나 다를 게 없다는 식의 환멸을 부추기려 한다. 경제민주화 껍데기조차 거추장스러워 하며 우파 결집으로 나아가려는 박근혜에게 대선을 앞두

고 힘을 실어 주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최근 노동자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얻으며 전진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고 사회적 분위기를 경직시키려 한다.

대선이 다가오며 지배자들의 이런 시도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인 ‘왕재산 사건’의 항소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왕재산 결성 혐의가 무죄라면서도 구속된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9년 형을 선고했다. 1년 동안 1백13명을 소환 수사하고 2백 명 넘는 사람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들춰 봤다. 전교조와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등 진보단체 활동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3명에게 갑작스레 소환장을 발부하고, 1년이나 지난 반값등록금 집회와 한

미FTA 반대 집회 참가를 이유로 활동가들을 줄줄이 소환·연행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속되는 진보진영 위축 시도와 마녀사냥에 맞서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떠나 단결해 맞서야 한다.

김지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

일시: 11월 24일(토)

장소: 서울광장

- 14:00 금속노조 결의대회

- 15:00 함께 살자 결의대회

- 16:00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본대회)

- 17:30 가두행진

유럽을 뒤흔든 공동총파업

“우리는 다른 유럽을 만들 것이다”

김종환

11월 14일 사상 초유의 유럽 공동총파업과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이날 유럽 23개 나라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행동이 벌어졌다.

유럽 반긴축 투쟁의 선두에 있던 그리스 노동자들이 특히 공동총파업 소식을 반겼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11월 7~8일에 벌어진 48시간 총파업 시위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국기를 나란히 들고 행진했다.

공동총파업을 처음 호소한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14일 0시부터 파업에 나서며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화답하듯 그리스 국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한 우체국 노동자는, “모든 곳에서 같은 날 함께 파업한다니 정말 꿈만 같다. [1974년 포르투갈] 혁명 당시 나는 세 살이었는데, 수십 년 만에 그런 저항이 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긴축에 반대하고 일자리와 유럽의 단결을 위한”(유럽노총) 공동총파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노총인 노동자위원회(CCOO)도 파업 전날 밤 8시 반부터 집회를 개최했다. 사람들은 “총파업으로 영업 안함. 다른 미래는 없다”는 스티커를 거리와 상점에 부착하며 다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힘든 맥도널드 노동자들도 작업장을 박차고 나왔다. 스페인 전체 노동자의 80퍼센트가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리아 노동자들도 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시위대는 중앙역 철로에 드러누웠고, 노동자들은 지하철도 멈춰 세웠다. 학생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고 지방청사를 점거하며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노동부 장관이 졸업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고 말한 것을 폭 잡아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싸우겠다”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유럽 노동자들이 이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총파업을 벌인 것은 모든 유럽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27퍼센트다. 그런데도 독일 총리 메르켈은 공동총파업 이를 전 포르투갈을 방문해서 “용감한 길을 걷고 있다”며 포르투갈 정부를 치하했다.

이웃나라 스페인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2배 더 높다. 정부와 트로이카(유럽연



11월 14일 국경을 뛰어넘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한 유럽 노동자들.

합, IMF,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은 뻔뻔하게도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40만 명의 집을 빼앗고 강제 퇴거시켰다.

강제퇴거

그리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 위기 전에도 독일보다 1.5배나 많았고 OECD에서 한국, 칠레 다음으로 높았다. 그런데 트로이카는 토요일에도 일

해야 한다고 강요해 왔다.

그러면서 지배자들은 남유럽 노동자들을 “돼지들”(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첫 알파벳 모음)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유럽과 이간질 해 왔다. 그러나 이날 파업은 이런 논리를 산산조각냈다.

“무엇보다도 남유럽 동지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재앙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유럽을 만

들기 위한 진짜 싸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총파업과 때를 같이해 전국 파업을 벌인 벨기에 철도노조 조합원의 말이다. 이들은 철도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공무원노조는 3시간 파업을 벌이며 공동총파업에 힘을 보했고, 터키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벌였다.

프랑스 노총들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

그리스 — 긴축안을 통과시킨 정부가 또 무너지려 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지난 7~8일 48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이 와중에 의회는 새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이 7백쪽이나 되는 긴축안 문건을 받은 지 이틀도 안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삭감안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구호는 아주 현실적이다. 긴축을 강요한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에 전체 3백 표 중 1백55표

이상으로 긴축안을 통과시켜 집행능력을 입증해보라고 했었다. 그런데 긴축안은 겨우 1백53표로 통과됐다. 트로이카는 경과 보고서를 지켜봐야 한다며 약속한 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

“트로이카가 자금 제공을 거절한 것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는 긴축안이 통과되면 모든게 잘 풀릴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그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고 그

리스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전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긴축안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스 노조연맹들이 지도부가 계획한 48시간 총파업이 끝난 뒤에도 언론·발전·운송·지방정부·보건 노동자들은 파업을 유지했다. 새 긴축안으로 해고 위기에 처한 대학 노동자들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유럽 공동총파업

인, 포르투갈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들이다”라며 시위를 벌였다.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인이다” 시위가 열렸다.

이번 공동총파업과 연대행동은 유럽 노동자 투쟁이 크게 전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이미 하루 파업을 넘어서 무기한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요 작업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이번 공동총파업은 이런 목소리에 큰 자신감과 대의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2년 전 노조 지도부가 총파업 직후 연금 개악에 합의해서 큰 환멸에 빠졌다가 다시 투지를 회복하는 중이었다. 공동총파업은 이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급진화에 역행하며 긴축을 추진한 주류 사민주의 정당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그리스 시리자, 프랑스 좌파전선, 스페인 좌파연합당과 같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동시에 뾰족한 정치적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대중들 사이로 파시즘과 인종주의도 침투하고 있다.

유럽의 혁명적 좌파는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할 뿐 아니라 이런 정치적 지형에 개입하며 진정한 대안도 발전시켜야 한다.

유럽 공동총파업은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무엇보다 유럽 공동총파업은 전 세계와 이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도,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엄청난 투지와 자신감을 선물하고 있다.

눈앞에 펼쳐진 노동자 국제주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말은 그 뒤 우리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 됐다.

지난해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를 거쳐 지금도 시리아 등을 휩쓸고 있는 아랍 혁명은 이런 마르크스의 ‘국제주의’가 공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유럽 공동총파업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 세계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에게 주입되는 사상은 우리가 ‘우리 나라’에 근본적 일체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문화·스포츠·정치인들 모두 이런 사상에 기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국의 이익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엔겔스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



유럽 공동총파업에 나선 스페인 노동자들 국제적 단결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다.

국이 없다” 하는 말도 했다. 각국 지배자들은 내핍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활

용해 왔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내핍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일로 경제 위기의 불뚱이 튕다거나, 피난처와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들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꽃길거리’라고 비난한다.

이런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기’로 이득을 얻는 것은 유럽의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었다. 각국 노동자들은 모두 임금·연금 삭감과 복지 축소라는 지배자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노동자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이간질

사실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 기간에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족주의는 4백~5백 년 전에 자본주의와 함께 유럽에서 등장했다.

민족주의는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흐리고,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 사이의 일체감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데올로기가 됐다. 또,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고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직 국제적 투쟁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이 혁명[공산주의 혁명]이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가? … 아니다. 세계 시장을 만들어 낸 대규모 산업 때문에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엔겔스)

유럽 공동총파업에서 멋들어지게 나타난 노동자 국제주의는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긴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 국제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운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장호중

역사적인 파업을 성공시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차 파업은 더 크고 강력할 것이다”

지난 11월 9일 “사람이 아니라 분필, 지우개와 같은 물건 취급” 받으며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일 어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서울지역일반노조 소속 학비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역사적인 첫 파업을 벌였다.

학비 노동자들은 최근 2년여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당시 민주노동당 등의 활동가들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며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순식간에 전체 15만 명 중에 25퍼센트인 4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동안 ‘아줌마’, ‘어이’라고 불리며 호봉도 수당도 못 받던 학비 노동자 1만여 명이 “비정규직이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 강사에게 배워 비정규직이 되는 미친 나라를 바꾸겠다(박금자 전국학비노조위원장)”고 다짐하며 투지를 다진 것이다.

보수언론들이 “급식 대란”, “아이들의 밥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고 비난했지만, 학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꺾을 수 없었다. 압도적으로 신규 조합원인데다 수백 수천 개의 학교로 흩어져 있는 현실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천명했지만, 오히려 반발만 키웠을 뿐이다. 결국 학비 노동자들은 ‘전교조도 20년 역사 동안 해 본 적이 없다’는 파업에 나섰고 성공했다.

파업에 나선 학비 노동자들은 “내 생애 가장 찬란한 날이다”, “내가 이 속에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높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초부터 학비 노조 세 단체가 ‘연대회의’로 단결해 공동 투쟁을 벌인 것이 학비 노동자들의 대열을 늘리고 힘을 키운 원동력이었다. 서울지역일반노조 소속 학비 노동자들도 1차 파업에 가세해 힘을 보탰다. 노동자 단결이 더 큰 힘으로 발전한 것이다.

전교조가 이 투쟁을 든든하게 지원한 것도 커다란 힘이였다. 전교조는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지부·지회·분회별로 연대 방침을 마련했다. 현장의 상당수 교사들도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고, 파업 지지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에 함께 맞섰다.

많은 학부모 단체와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생 들도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학비 노동자들은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 당선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집회와 하루 파업을 벌이며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고 정부와 대선 후보들을 압박했다.

파업 당일에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1천여 명이 새로 가입했고, 곳곳에서 노동조합 가입서가 쇄도하고 있다.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운동의 일보 전진이었다.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 노동자 들의 투쟁,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더불어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체 계급세력의 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의 위기를 재촉하는 데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성과

1차 파업의 성과로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에서 2013년 호봉제 책정을 위한 8백8억 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또, 국회 문방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를 10퍼센트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다. 11월 20일에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연구팀 구성안이 논의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난해에도 국회 교과위 예산소위가 7백12억 원의 호봉제 예산을 책정했지만, 본회의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바 있다. 또,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민주당도 믿기 힘들다. 무엇보다 교과부와 10곳의 보수교육감들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학비 노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호봉제 도입 예산을 거부하거나 교과부가 교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11월 중 2차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2차 파업의 규모와 시기는 1차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2일에 2차 파업에 나서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와 새누리당이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학비 노조는 예고한 대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2차 파업에 단호하게 돌입해야 한다.

2차 파업에서도 학비 노조들의 굳건한 단결, 전교조와 학부모·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연대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2차 파업으로 호봉제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교과부와 10곳의 보수교육감을 교섭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박성환



김민아 기자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더 넓은 연대를 건설하며 단호하게 2차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의 응원 목소리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 주세요”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파업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파업을 하지?”

이 얘기를 들은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데도 너의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된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헛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늘어나는데도 너는 그대로라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면 기분이 어떨

까? 게다가 이런 일을 수년, 수십 년 동안 참고 있었다면 어떨까?”

저는 파업 전부터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실시와 교육공무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학생들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우파 선생님들의 감시와 탄압으로 공개적으로 서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서명 취지를 들은 학생들은 흔쾌히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란 겁니다. 또, 수업 시간에 인권, 평

등, 민주주의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로만 인권, 평등,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참된 인권, 평등,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학생들이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학교 생활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지지합니다! 파이팅!!

인천의 한 중학생

학부모의 응원 목소리

“더 당당하게 투쟁하세요!”

“학교비정규직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정규직이 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도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해야 합니다.

보수언론은 ‘급식 대란’, ‘학습권 침해’ 등을 말하며 (파업을) 비난했습니다. 그

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을 결코 옹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는 결코 불안정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학교 현실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파업에 학부모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당당하게 투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사회적 압력에 밀려 쪼쪼매면서도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역겹게도, 경총과 보수언론도 이런 사측을 거들며 “비정규직 짓밟는 대기업 노조의 횡포”(조선일보)가 진짜 문제라고 독사의 혀를 놀리고 있다.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는 1987년 이후 등장한 강력한 민주노조 운동과 경

제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었다. 정부는 IMF 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통과시켜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르고 저임금·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을 증가시켰다. 기업주들도 노조를 회피하고 투쟁의 성과들을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동귀족론’을 퍼 온 박태주 교수가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으로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대”를 주장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는 “고용 유연성이 사내하청의 규모를 줄이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고 고용불안을 키울 것이다.

김기원·김대호·박태주 등 친민주당 지식인들은 2008년 위기 이후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2011년 희망버스 운동, 올해 쌍용차·현대차비정규직 투쟁 등 투쟁 때마다 거듭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하다’고 떠들어 왔다.

그러나 정리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한겨레〉)다. 현대차 정몽구는 지난해만 8조 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고용 불안, 저임금, 온갖 차별을 인정해야 하는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청년들의 염원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대중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들은 애써 투쟁의 의의를 깎아내리지만,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을 복직시켰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은 정몽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대안은 타협 가능한 “현실적 목표”로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운동의 목표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유럽의 긴축 정책이 낳은 끔찍한 현실이 보여 주듯, 살인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을 필요로 하는 이 비정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도 발전시켜야 한다.

박설

흔들리기 시작한 현대차를 더 몰아붙이자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 농성으로 다시 떠오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광범한 지지와 연대 속에 승리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현대”의 도시 울산 시민 여론조사에서 56.5퍼센트가 철탑 농성을 지지했고, 61퍼센트가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지지했다.(통합진보당 여론조사 결과)

이런 전진에 현대차 사측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측은 “신규채용안” 강행 꿈을 여러 번 천명했지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겨레〉 보도를 보면,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정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도 ‘사측이 사실상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10년 동안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 비판에 모르쇠와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고공 농성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연대했던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압박이 형성되면서 지배자들의 분열도 생겨났다. 노동부 장관과 노동위원회, 대법원이 현대차 사측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투쟁이 초점을 형성하고, 일부에서는 전진을 이뤄내기도 했다. 쌍용차 해고자 투쟁에 대한 광범한 정치적 지지, 차별을 뚫고 성공적인 1차 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기나긴 투쟁으로 복직을 따낸 한진중공업 해고자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경제민주화 목소리와 최근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사건 등도 영향을 줬다”고 실소했다.

물론, 정몽구 일당은 한 발 물러서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불법파견 범위를 축소해 후퇴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사측은 “노사 모두 동의하는 불법파견 공정을 추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몽구 일당은 어디까지가 불법파견이나 공방을 벌이며 소나기를 피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작업장에서 불법파견의 여지를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일하던 공정을 분리하고, 아예 8월부터는 불법파견 일락을 지우려고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 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를 이간질하려는 속셈도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에도 사측은 2000년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정몽구를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계추를 왼쪽으로 옮기고 있다.

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합의한 “사내 비정규직 사용 상한선 16.9퍼센트”를 비정규직 확대 정당화의 근거로 써먹었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이런 시도에 결코 휘둘러서는 안 된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공정 추출”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바로 노동자들의 분열이다. 일부 공정만이 불법파견 인정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나머지 공정에선 비정규직 고용이 용인되는 셈이다. 일부는 정규직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남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술렁임도 있다.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올해 4월에 합의한 원하청 공동 요구안의 핵심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투쟁해야, 현대차 1만 3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현대차 노사전문위원을 지낸 한국노동교육원 박태주 교수는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꿈쩍 않던 정몽구 일당이 왜 흔들

철탑의 불씨를 작업장 투쟁으로

정몽구 일당이 흔들리기 시작한 기회를 이용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저들의 후퇴를 굳히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철탑이 지퍼 놓은 정치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이 불씨를 작업장 투쟁으로 연결해야 한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박현재 지회장이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 참가를 호소하면서 밝혔듯이 “철탑의 불씨를 현장으로, 현장의 불씨를 급속 노동자 총파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울산·전주·아산 비정규직 3지회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현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의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적극 막아

서야 한다. 자동차 조립 라인의 중요한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일손을 놓고 대체인력까지 저지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을 해도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때문에 파업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투적 정규직 활동가인 엄길정 동지가 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실질적 원하청 연대”를 위해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사측 관리자, 반대조, 일당직 저지를 포함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대체인력 저지 지침”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의 정규직 조합원과 직영 계약직 대체인력 투입 거부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1공장 사업부위원회의 호소처럼,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정규직 활동가들이 더 적극적으

로 대체인력 저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14일에 울산 1공장에서 대체인력 저지 투쟁이 라인을 멈춰 세우며 성과를 냈던 것처럼,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공장 안에서 대열을 맞춰 함께 라인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단결을 선동하고 관리자에게 맞설 필요도 있다.

물론, 사측이 “불법” 운운하며 공격하겠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이런 공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서 박현재 지회장에 대한 영장이 보기 좋게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보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급속노조의 연대 투쟁도 중요하다. 이 투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활동가들이 능동적으로 개입한 결과, 민주노총이 11월 17일에 울산에서 연대 집회를

리기 시작했는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그 바탕이었다. 따라서 더 큰 전진을 이뤄내려면 노동자 연대와 단결로 힘을 강화해야 한다. 박태주 교수 등이 주장하는 ‘일부 공정 정규직화’ 방안은 결코 노동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의 핵심 취지도 현대차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내하청이 정규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현대차에는 2012년 6월 현재 1만 3천2백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1만 3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순이익 대비 9.6퍼센트 수준이다.”(심상정 의원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뽑아낸 이익의 일부만 투자해도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왜 이것이 비현실적인가.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의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깔고 있고,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낯날을 겨누는 것이다.

한때 다소 흔들렸던 정규직지부 지도부도 지금은 “최병승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해고자 복직”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있다.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더 나아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의 요구대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것은 연대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특히, 급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위한 전 조합원 1천 원 납부, 쌍용차 투쟁 등과 연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투적 활동가들이 더 강력한 파업을 촉구하는 현장 발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계획이 통과돼야 하고, 활동가들은 작업장에서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철탑의 정치적 연대,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투쟁, 급속노조의 연대 투쟁이 결합된다면 이 투쟁은 더 전진할 수 있다.

철탑의 외침과 호소에 희망이 맺히기 시작했다. 철탑의 고압 전류를 투쟁과 파업의 강력한 전류로 연결시키자. 우리의 꿈은 정몽구의 악몽이고, 정몽구의 악몽이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꿈을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자.

갈수록 뜨거워지는 청년·학생 들의 연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연대가 더욱 확대됐다.

11월 15일 15개 대학 학생회 대표자·차기 학생회 선거 출마자·당선자 50여 명과 21C 한국대학생연합, 네가지 없는 대학생 모임,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사람연대,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전국학생행진,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등이 공동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청년학생 대표자 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8백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의 아픔은 곧 청년·학생들의 미래이자, 현재”라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



“비정규직의 아픔은 곧 청년·학생들의 미래이자 현재다” 11월 15일 15개 대학 50여 명의 학생회 대표자·차기 선거 출마자와 여러 학생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현대차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에도 적극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려대에서는 진보신당, 생활도서관, 고대문화,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학생들이 공동 홍보전을 벌였다.

모금

노동자연대학생그룹도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에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이 주도해 모금한 금액이 1백50여만 원에 달한다.

대전·충청 지역 대학생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에서 모금을 호소해 35만여 원을 모금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응이 대단했다. 이들은 “우리랑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야” 하면서 선뜻 돈을 내밀었다.

또, 한신대 학생들은 영화 〈유신의 추억〉 상영회에서 모금을 받았다. 한국의대 중국어대 학생들은 축제 때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 찾침을 열어 수익금을 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런 연대가 더 확산돼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연대를 건설해 나가자.

조익진

깊어 가는 경제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6퍼센트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유로존 위기다. 유로존 위기는 매우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위기가 이처럼 질질 끌며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유럽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의 해법을 두고 분열해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이런 통화·재정 정책에 ‘강력한 긴축’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유럽 지배자들 내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 지배자들은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 위기 국가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겨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의 주택가격이 최근 1년 동안 약 20퍼센트나 상승했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가 최악의 사태로 악화되지 않더라도, 유로존 경제 침체는 갈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정부지출 축소, 세금 인상, 실업수당·연금지급 축소 등의 긴축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 부진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조금씩 오르며 고용도 늘어났던 미국도 2012년 2분기부터 다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매월 4백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를 반등시키려 했지만, 이미 2차례의 양적완화도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

미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재정절벽’ 위기다. 미국 정부는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때문에 세금 인상, 지출 삭감 등으로 2013년에 7천2백80억 달러(GDP의 4.6퍼센트)의 대규모 긴축을 시행해야만



박근혜도 “내년에 닥칠 세계적 경제 위기가 초점”이라며 본색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한다. 미국 의회에서 긴축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던 중국 경제는 2012년 2분기 수출과 내수가 같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불문율로 여겨지던 8퍼센트를 밑도는 7.6퍼센트를 기록하더니 3분기에는 7.4퍼센트까지 떨어졌다.

2012년 1~8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7퍼센트에 그쳤다(2011년 수출 증가율 20퍼센트). 수출의 70퍼센트가 선진국으로의 수출이어서,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중국 정부는 2009년과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도 힘들다. 기존의 투자도 부실 위험이 높는데다 물가 급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 세계 경제에서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2012년 들어 한국 수출은 정체

하고 있고, 투자 증가세도 크게 꺾였다.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유로존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착륙 등 커다란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3년 경제는 2009년 극심한 침체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산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샌드위치론

이에 따라 재벌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줄인다면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지배자들은 199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보일 때마다 ‘넛크래커론’, ‘샌드위치론’ 등을 펼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재벌들은 실제로 투자를 연기

하며 정치권을 압박하는 듯도 하다. “전 경련 등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잇단 협박을 마치고 주요 그룹사들이 뒷받침 하듯 이를 실행하고 또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압박에 영향을 받아 박근혜는 말뿐이던 ‘경제민주화’조차 주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김종인조차 박근혜가 “재벌 논리에 동화되고 있다”며 지적할 정도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지 재벌과 새누리당만의 것은 아니다.

안철수는 이미 “내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총리가 가진 지혜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현재를 영입했고, ‘혁신경제’론을 내세우며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물론 문재인과 안철수는 복지 확대 주장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성

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이들 주장은 경제 위기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복지도 힘들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또는 안철수가 승리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뿐 아니라 대기업·부유층과 경제관료의 압박에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무현 정부가 이미 그런 길로 간 바 있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힘은 기성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진도 이것을 멋지게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대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사회적 지지에 밀려 결국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성과도 있었다.

또, 사측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어용노조를 만들었던 SJM·유성·KEC 등에서 민주노조가 다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하며 사회적 지지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연대를 건설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지배자들의 대응은 더 악독해질 것이다. 최근 복잡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이 바로 유급휴직에 들어간 상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기업들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 경쟁 때문에 경제 위기를 낳고, 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려면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거부하는 관점에서 운동을 건설하며 대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1월 14일 국경을 뛰어넘어 벌어진 유럽 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은 이런 대안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강동훈

한진중공업 92명 복직

“투쟁으로 얻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2명이 1년 9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는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이 거둔 기습 벚찬 성과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정리해고가 철회된 것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측은 수주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현장 인력 7백여 명 중 2백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휴직 상태로 돌린 상황이다. 복직한 92명도 유급휴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측의 반격을 대비하며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연대를 지속해야 할 과제를 안고 복직했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공동대표에게 복직의 의미와 소감, 향후 투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회사는 우리를 들여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복직시킨 것인데요. 그들도 희망버스와 여론의 집중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 노동자대회 때 한진중공업 노조가 무대에 올라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인사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거든요. 한 조합원은 울기도 했는데, 연대동지들도 복직 소식을 듣고 기뻐 눈물도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투쟁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기는 싸움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의 복직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고 투쟁 현장에 있던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버스 때 어떤 교수가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라고 했는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기업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돈벌이를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사고입니다.



희망버스 광범한 사회적 연대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의 희망을 보여 줬다.

정리해고법이 역사도 별로 길지 않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해고의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타당성을 인정해 줬거든요. 정리해고법이 통과될 당시에 운동 세력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정리해고법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법문을 그냥 좀 고치자는 의견인데, 결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입니다.

2011년 희망버스 때 우리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같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정말 살인해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단식이 거의

40일이 다 돼 가는데, 연대 투쟁의 힘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한진중공업 사측은 특히 민주노조를 철저히 부정하는데, 조합원들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노조 조합원의 80퍼센트가 사측 노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민주노조 깃발은 꽃고 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뿔뿔 뿜쳐서, 더는 안 떨어져 나가게 하고, 투쟁이 있어야 무슨 일이 터져도 노동자들을 집결시키고 조직할 수 있거든요. 회사 압력으로 사측 노조로 넘어간 조합원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투쟁에 집중하려고 이번엔 복직한 정우위의 92명도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조합원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고요.

끈기 있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소은화

‘경제민주화’ 가면 벗고 1% 본색 드러내는 박근혜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 문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11월 8일 박근혜를 만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이 던진 말이다.

박근혜는 요즘 이런 자신의 핵심 계급 기반의 요구에 따라 노골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다.

‘먹튀 아니냐’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사실상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가면을 벗어던졌고 김종인을 토사구팽하고 있다. 조중동과 경찰도 이런 박근혜의 우향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경찰은 새누리당사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끌어내 연행했고, 조중동은 서울광장 앞 대한문 농성촌을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울뿐인 ‘국민대통합’ 가면을 벗고서 ‘1퍼센트 보수 대통합’을 향하는 것이다. 이런 우향우에는 주류 지배자들의 커져가는 위기감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경제 위기 확산 국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유럽 수출은 16퍼센트나 줄었다.

집권 우파의 정치 위기도 심각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은 높고, 최근 검찰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아귀다툼에서 보듯 레임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내국동 특검은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비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고, 당장 구속 수사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명박은 내국동 특검을 방해하고 수사 연장을 거부했지만, ‘법과 원칙’ 운운 하던 박근혜는 입도 벅긔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한겨레〉 조사에서도 60퍼센트가 ‘새누리당의 재집권’보다 ‘정권 교체’가 낫다고 답했다.

게다가 박근혜의 중도층 확보 노력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집토끼 묶는 것에 치중하며 투표를 떨어뜨리기로 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약점을 이용해 선거판을 지지분화하게 만들며 반우파 정서가 투



11월 15일 박근혜 건국대 방문 항의 행동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건국대 학생 등이 박근혜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로 찢어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표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요새 새누리당 공식 논평은 하루 열 건 가까이가 야당 후보 비리 의혹을 재탕삼탕하며 꺼내 놓는 것인데, 대변인을 일곱이나 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화살 1백 발을 쏘서 하나만 맞으면 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식이다.

지지분하게

이처럼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의 정치적 궤적을 돌아보면, 그가 늘 권력을 위해선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는 전형적 부패 우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기 힘들어 보이자 탈당했는데, 이때도 본색을 숨기고 김정일을 만나고 오는 등 ‘시류 영합 쇼’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국미래연합 창당 비용 2억 원을 한나라당한테 받고 복당했다. 사실 이 돈이 바로 훗날 문제가 된 ‘차떼기 대선자금’에서 나

온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2004년 바로 그 차떼기 수사와 노무현 탄핵으로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리자, 박근혜는 시치미 뚝 떼고 깨끗한 척하며 당권을 차지했다. 그때 차떼기 수사로 유명해진 검사 안대희는 유독 박근혜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근혜 캠프에 발탁됐다.

박근혜는 2004년 가을에 이른바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규명법·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칭 “국가정체성 수호” 투쟁에 ‘올인’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한나라당 최연희가 “[국가보안법 문제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도대체 국가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위세 떨친 공안검사 출신에게 ‘국가관’을 따져 물을 정도니 박근혜의 국가관이 얼마나 우파적인지 알 만하다.

이 투쟁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었는데,

박근혜는 자서전에서 당시 의원총회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주었다.” 이것이 지금껏 10년째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을 내세우는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이다.

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실패가 낳은 환멸 때문에 우파 집권이 확실해 보인 2007년 대선 때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내세우며 우파들한테 아부하느라 정신 없었다.

뉴라이트 회합에 가서는 “제가 꿈꾸는 사회도 바로 뉴라이트가 꿈꾸는 사회와 같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고, 자본가들에게는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 자리를 이명박에게 빼앗긴 후 이를 갈긴 했지만, 정작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반노동 정책과 대립한 적이 없다. 4대강, 부자 감세에 적극 찬성했고, 쇠고기 협상 결과, 쌍

용차와 용산 사태에도 침묵했다.

이러던 박근혜가 무상급식 등 진보의 제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자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궤변을 내뱉으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온 것이다.

박근혜의 본색과 지향은 어떻게든 집권해서 1퍼센트 기득권을 옹호하며 국가의 힘으로 반동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가 개혁을 바라는 젊은 층에게 매력을 주지 못해서 중도 확장에 실패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박근혜 세력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결집해 있는 우파 지지자들만 잘 유지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문재인·안철수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진보진영에게 투쟁과 대안 건설의 과제를 던져 준다.

곳곳에서 투쟁하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이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김문성

문재인·안철수 단일화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동참하라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싶더니, 논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안철수 캠프의 반발 속에 16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는 최근 문재인에게 지지율을 추월당한 안철수의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가 자신을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위치 지으면서 지지율이 정체하는 동안, 문재인의 지지율은 다소 올라 왔다.

안철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필요하다’거나,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실망을 사 왔다.

반면, 문재인은 노동계와 진보 대중에게 자신이 ‘노동자의 친구’라고 여필하며 다가가고, 최근 열린 주요한 노동자 집회에 직접 참가해 그럴듯하게 들리는 연설도 했다.

그러나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여전히 진보 대중의 열망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1일 발표한 정책을 보면 문재인·안철수 모두 0~5세 무상보육, 의료비 1백만 원 상한제 등 여러 복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

히 재정 마련 방안은 비어 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가 박근혜 저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즉,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을 투표장에 불러내려면 단지 ‘박근혜가 권력 잡으면 큰일 난다’는 경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의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청년 들의 변화 열망에 포퓰리즘적으로 호응하려 하면서도 근본에서 자본가·기득권 세력의 심기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문재인·안철수에게는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 최근 문재인은 대표적 보수 세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고 NLL 사수를 다시 다짐했다. 제주 해군기지의 내년 예산안도 그대로 통과 시키기로 스리슬쩍 입장을 바꿨다.

안철수는 전경련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고, 전경련은 그후 “지금까지의 불안을 많이 해소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안철수 캠프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안 후보야말로 친재벌 후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지만, 권력을 잡

을지라도 이들이 자본가·기득권 세력에 맞서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안철수가 추진하는 ‘국민연대’에 진보 세력과 노동계까지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믿기 어려운

박명림 교수는 “한국 사회의 근본개혁과 복지화·형평화·인간화”가 가능하려면 “민주개혁세력의 확대를 통한 개혁연합과 복지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합에는 “노동을 포함한 하층 포용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만들기로 한 ‘국민연대’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더 나아가면 진보정의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명박 정권 연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 또는 통합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리고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정권교체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정책연대나 가치 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이에 호응하고 있다. 사실 통

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지도자들은 ‘정부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민주당과의 공동정부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내년에 경제 위기가 한층 더 심화하리라는 점 때문에 누가 당선하든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앞장서리라는 점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세력과의 계급연합(과 공동정부) 구상은 위험하다. 그것은 진보진영의 독립적 목소리가 흐려지고, 요구가 삭감되며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과 안철수는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며 노동자들도 양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안철수는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을 살리기 위해 정규직의 양보를 요청해야 하고, 정년을 지키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요청해야 한다. … 학비 때문에 밤새워 일하는 학생 분들에게도 조그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민주세력’과의 연합·공동정부를 구성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기보다 ‘고통분담과

양보’를 설득하는 구실을 강요받을 것임을 짐작케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한 진보의 목소리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부자·재벌 증세로 연간 61조 원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면한 실천 과제로 “정리하고 없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백혈병 없는 삼성전자”를 말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인 김순자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밀어 쥐도 세상은 안 바뀐다”고 비판했다.

“정리하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싸워야 하고 투쟁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의 말도 옳다. 진보진영은 문재인·안철수가 추진하는 공동정부 구상과는 선을 그어야 하고, 최근 전진하고 있는 노동자 투쟁들을 고무하며 다음 정부 하에서 예고되는 노동자 공격에 대비하며 꾸준히 단결과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현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 — 가난한 자들의 희망? 부자들을 위한 이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왜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재선했는지, 그리고 그의 승리가 미국 자본주의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버락 오바마의 재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자본주의에 최선의 결과다. 이 말 이 의외처럼 보일 수는 있다. 어쨌든 소득 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공화당 후보 롬니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으니 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거 전에 썼듯 “대부분 원래 한 번도 오바마를 지지한 적 없던 [2012년 10월에 자사 노동자 4만 5천 명에게 오바마가 재선하면 해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거대 에너지기업의 경영자들이자 미국 4위 부자인] 보수적인 코크 형제들, 월가, 거대 석유기업 간부들 같은 산업계의 거물 다수는 롬니 당선이 참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되살라는 명확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런 선택은 대부분 탐욕 때문이다. 월가는 기껏해야 은행에 약간의 규제를 가하는 도드-프랭크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으려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부문을 가릴 것 없이 사자들은 버락 오바마가 선거운동의 기조를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로 삼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마르쿠스가 오래전에 지적했듯, 자본가 개개인은 여물통에 주동이를 너무 깊이 착박고 있느라 종종 계급적 이익에 대해 생각을 못 한다. 국가의 기능 중 하나는 이런 자본가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다. 롬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기업들의 흥룡한 손발이 됐을 것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주된 기반이 하층 중산계급 백인 미치광이들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태 반대나 진화론 같은 소위 사회적 정점에 몰두하면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티파티’ 운동은 공화당의 이런 기반을 동원해 국가의 구실을 급격하게 줄이려는 ‘성전(聖戰)’을 조직해 왔다. 그

결과, 상·하원 공화당 의원 거의 모두가 중세에 반대표를 찍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바마는 추락하는 미국 자본주의를 떠받치기 위해 국가권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려 했다. 오바마는 조지 W 부시의 월가 구제를 계속 추진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고 재조직하기도 했다.

롬니가 명명하게 비난한 후자의 정책이 아마 오바마가 몇몇 중사부 산업 주들에 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던 것 같다. 이는 또한 미국이 주요 공업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더 유연한 이민자 정책을 바란하기도 한다. 롬니는 자신의 미치광이 지지자들을 달래려고 이민자들이 “셀프 추방”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때문에 우박계 미국인 유권자 다수가 오바마를 찍었다.

‘재정절벽’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광신자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011년 7월 의회에서 미국을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내몰았는데,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른바 ‘재정절벽’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이는 중요한 정점이다.

오바마와 의회는, 그들이 정부 부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부시의 부자 감세 정책이 끝나는 올해 말 자동적으로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감아 줄자하기로 ‘재정절벽’ 합의했다. 이 합의로 부채 위기는 일단 유예됐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실질 국민소득은 2.9퍼센트가 줄어 들 것이고 일자리 3백4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미국과, 아마도 전

세계가 또 다른 불황에 빠질 것이다.

당연히, 경제가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재선 이후 오바마의 최우선 과제다. 이는 하원을 통제하면서 지금까지 그에게 협력하지 않는 공화당과 오바마가 합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부유층에 대한 약간의 중세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제(연금)와 메디케어에 대한 삭감을 맞바꾸려 들 것이다.

이런 거래는 미국 대기업의 이익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 대기업은 세금 내기는 싫어하지만, 국가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 부세를 둘러싼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정쟁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경제전문가들은 부채 문제가 미국에 실제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들 두고 논쟁을 벌인다. 확실한 것은 구제금융과 불황 때문에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금융 거품 시기에 은행에 누적된 민간 부채가 공공 부채로 전화되고 있다.

공공 부채 감축의 대가는 대체로 오바마를 찍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연방정부부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복지가 더 줄어들고, 또 주 정부가 자주 대규모 긴축 정책을 쓰면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공화당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보며 기쁘기도 하겠지만, 너무 오래 기뻐해서는 안 된다. 백악관에 복귀한 오바마는 그 특유의 무심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1퍼센트의 친구인 오바마와 롬니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이번에도 미국 민중의 희망을 실망으로 바꿀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재선한 오바마가 한반도 평화에 눈을 뜰 거라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궁지에 몰린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화려한 걸치장도 중국 지배자들의 분열을 감출 수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9호 / 번역 김연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후보 인터뷰

“투쟁으로 교육을 바꾼다는 원칙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전교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의 투쟁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김정훈·이영주 후보(기호 2번)와 진보교육감·민주당 등과의 협의를 강조해 온 전임 지도부를 계승한 황호영·남궁경 후보(기호 1번)가 경선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 온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교찾사) 경향의 김정훈 위원장 후보를 인터뷰했다. 김정훈 후보는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장이며, 지난해 교원평가제에 맞선 투쟁 등에서 진보적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바 있다.

“현재 학교는 일제고사, 교원평가, 학교평가라는 평가의 삼각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입시 체제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고, 선생님들도 교원평가로 서열이 매겨지고, 이게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방황 하고 있을 때 따뜻하게 감쌀 여유가 학교에는 없습니다. 교육은 없는 거죠.

학급당 학생 수는 많고 교사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초중등 시행령에 있는 법정 정원조차 없앴다고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녹초가 되는데 언제 전교조 분회활동 하겠습니까. 학교 폭력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법정정원 지켜내고 교사 수를 확충해야만 정말 발달과 협력이 있는 교육과 수업이 이뤄집니다. 이걸 시급한 과제예요.

우리는 교육혁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체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초중등 교육이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1월 3일 2만여 명이 참가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지난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투쟁으로 교원평가·일제고사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도 대폭 늘었다.

학교가 정말로 협력의 공간이 되려면 학교비정규직들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을 교육혁명에 함께 녹여내야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전교조 지도부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교원평가가 강요되는 것을 눈뜨고 봤고요. 차등 성과급이 개인별 차등에서 학교별 차등 성과급으로 가게 됐죠.

여섯 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는데 그것도 잘 활용을 못 했어요.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진보교육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이거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조직을 통해서 진보교육감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전교조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전교조 위기의 원인은 투쟁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네이스 투쟁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논란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네이스 투쟁 때는 조합원 수도 늘었죠. 2003년에서 2004년 중반에는 조합원 수가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후 탄압이 들어오면서 소폭 줄었어

요, 그 뒤에 기층 교사들이 폐기시키길 원했던 교원평가에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전교조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있었습니 다. 이후 2005년부터는 조합원이 계속 감소한 거예요.

안 싸워서 조합원이 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북지부는 지난해 대비 조합원이 5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안 싸워서 조합원 수 줄었다”

저희는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교무위 회의를 사실상 의결기구화 하는 등 학교자치의 영역을 열어 놓았습니다. 혁신학교 운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진보교육감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견제라는 원칙을 잘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관료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노동조합의 원칙을 가지고 견인해

내야 해요.

저희는 교원평가 가지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 등에 흔들릴 때 농성에 들어갔어요. 15일 단식 농성을 하는데 매일 설 새 없이 조합원들과 전북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힘 때문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실제로 변화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교육 의제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경쟁 교육체제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일단 선거시기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통해서 잘 해 주겠지, 이런 방식으로만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려면 실제로 변화를 견인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네이스 투쟁

2003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의 인적사항, 학적, 신체적 특징, 가정환경 등 2백여 가지의 개인 신상 정보들을 수집·집적하고 교육 행정 정보들을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네이스(NEIS)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이에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 파업을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는 ‘차세대 교육행정 시스템’으로 명칭만 살짝 바꾼 채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박근혜 맨’ 문용린에 맞서는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적 교육개혁을 전진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벌이는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서 민주당은 ‘전교조 불가론’을 퍼트리며 반대했지만, 이수호 후보는 민주노동 등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했다.

이수호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발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고교선택제 폐지, 자사고·특목고 일반계 전환,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내로 축소, 일제고사 폐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진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파들은 엇그제까지 박근혜 캠프의 참모였던 문용린을 후보로 내세웠다. 문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이런 힘 덕에 민주당의 ‘전교조 불가론’을 뚫고 이수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것이다.

용린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박근혜 선분의 교육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총괄한 전형적인 ‘박근혜 맨’이다.

문용린은 고교선택제, 자사고, 특목고 등 경쟁교육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파적인

주장도 해 왔다.

문용린은 한결같이 경쟁교육을 신봉하고 추진해 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무한경쟁교육을 부추긴 7차 교육과정 입안에 관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부 장관 임기 동안 기여입학제·대학 정원자율·교원평가제·수석교사제 도입, 종장직선제 폐지 등 온갖 개악을 시도했다.

그런데 최근 문용린은 ‘중1 시험 단계적 폐지’와 학생인권, 무상급식, 혁신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비쳤다. 이는 박근혜가 허울뿐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다 최근 내팽개친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정세가 진보진영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수호 후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을 반대하고 진보적 교육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이수호 후보가 노동운동 내에서 상당히 온건한 노선과 경향을 대표해 왔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수호 후보의 당선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일 것이다.

이수호 후보가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임을 강조하고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만큼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반전교조 공격에 적극 맞서면서 진보적 교육 개혁의 과제를 일관되게 대변하길 기대한다.

진보 교육감의 승리와 그것을 발판으로 한 진보적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을 위해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나가자.

김인숙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박근혜를 저지하고 진보·개혁을 이루려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밖에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에게서 문재인·안철수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해 완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향적인 대책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핵심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형해화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보질 못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사회적 대타협 같은 얘기를 꺼내는 건 그동안 진행돼 온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자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IMF 이후 15년간 고통분담을 얘기해 왔지만 그 결과 기업이나 재벌 들은 계속 부를 축적해 오고 규모도 키웠지만, 사회적 양극화는 더 진행됐잖아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생활비 압박을 많이 받아서 곧 임금인상 요구나 생존권 요구가 분출할 수밖에 없는데 고통분담 논리라는 게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거 시기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대선을 어떻게 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정의헌, 이해영, 고권일, 이유진 씨.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민 정책자문위원

안철수 후보는 한미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발을 빼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재협상 하겠다는 건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설명도 없구요. 문제 발생시에 고치겠다는 얘기는 [문이 떨어졌는데] 도둑이 들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수년 동안 노동자·농민·서민이 해 온 싸움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하면 문재인 후보는 ISD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을 실천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예요. 집권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진보·개혁적인 사람들이 관료 출신들을 제압해야 할 텐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발효 뒤 3개월 내에

재협상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도 이 얘기 꺼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뭉개고 있는 거죠. 대선 이후에도 그럴 거라고 봐요.

강력한 폐기 압력이 있어야 개정이라도 이뤄질 텐데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이명박도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고권일 제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후보는 역대 정부가 모두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한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 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잘못된 정책이라도 한 번 추진해 버리면 다음 정권에서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사과 발언 하나로 대선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가거나 하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구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도 국가안보 사업이고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추종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노무현 정권이 했던 일이라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신규 핵발전 증설과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탈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만으로는 임기 중에 '핵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핵발전소 다섯 개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폐쇄해도,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전력 중 핵



사진 (레프트21)

발전 비중이 37~38퍼센트로 증가해요. 따라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폐쇄 결단 없이는 '탈핵' 공약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퍼센트(문재인)와 30퍼센트(안철수)로 늘리겠다고 했으면 임기 중에 어떤 에너지를 늘리고 어떤 에너지를 줄여갈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의지와 비전, 세부 정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어렵도 없죠.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약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지윤, 장호중

일본 — '11·11 반원전 1백만 명 대점거'



사진 출처 일본노동신문

일본 민중의 힘이 노다 정권을 끌어내리다

11월 11일 열린 '반원전 1백만 명 대점거' 행동에 참가한 노동자·민중 10만 명은 노다 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를 보여 줬다.

'핵발전소 필요 없다', '오이 핵발전소 재가동을 멈춰라', '아이들을 지키자', '노다 정권 정신 차려라' 하는 구호를 외치며 참가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국회 일대를 '점거'했다.

이날 항의 행동은 국회,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도쿄전력을 비롯해 플루토늄 혼합연료(MOX 연료)를 사용하는 세계 첫 상업용 핵발전소인 오마 핵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전원개발(J·파워) 등 앞 아홉 군데 '항의 구역'을 거점으로 삼아 시작됐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의 '2030년까지 원전 제로' 정책은 눈속임"이라고 규탄했고, 사람들의 안전보다 핵 보유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핵발전 추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후쿠시마

"오이 핵발전소 재가동에 맞춰 간사이 전력이 5백 개에 달하는 핵 연료봉을 구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핵발전소 폐로나 보상은커녕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수십만 명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교차 1천9백80엔(2만 6천 원)짜리 방호복을 지급받고 있다."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도쿄

도와 도쿄지법은 집회 전 행진이 예정된 히비야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10만 명이 모인 이번 '대점거' 행동은 정치 양극화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핵발전·핵무장 추진, 수직이착륙기 오프리 강제 배치, 미일동맹 강화, 소비세 인상 등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무시해 온 노다 정권은 결국 '대점거' 행동 직후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을 발표했다.

임기를 채우려는 듯 버티기로 일관하던 노다 총리가 예정에 없던 중의원 해산을 발표한 것은 이런 대중 행동의 압력 때문이다.

최미선

낙태 수술 중 여성 사망

낙태 범죄화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한 여학생이 낙태 수술 중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한창 미래를 꿈꿀 열여덟 나이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어 간 그녀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된 몸이었고, 수능을 치른 뒤에야 뒤늦게 위험한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병원은 이 여성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 무려 6백50만 원을 뜯어냈다.

낙태한 여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와 학교 안에서, 비싼 수술 비용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숨죽여 울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진오비' 등 낙태반대 단체들은 이 죽음이 낙태 단속을 적극 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한다.

아니다. 바로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벌인 낙태 단속 캠페인이 그녀를 죽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마저 낙태를 금지한 형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지만, 낙태 불법화 때문에 여성의 삶의 결정권이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이들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여성차별적인 까닭이다.

1백 퍼센트 완벽한 피임법은 없다. 또, 미처 피임을 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 청소년 첫 성경험 연령이 14.2세인데도, 성관계는 안 된다는 협박 이외에 제대로 된 피임교육조차 이뤄지



지 않는 상태에서 10대가 실수로 임신할 가능성도 크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껍데기일 뿐이다.

만약 낙태가 불법이 아니었다면 초기에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면 낙태 시술조차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10대와 빈민, 노동계급 여성 등에게 낙태 비용은 그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줬다. 따라서 낙태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돈 걱정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 합법화만이,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대안이다.

최미진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이러한 대중행동이 선거나 의회 활동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선거 전술 가이드

존 몰리뉴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회와 선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관점과 전술을 명료하게 설명한 글을 소개한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의회를 통해 진정한 개혁을 이루거나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좌파가 의회 안에서 다수파 지위를 얻는 한편, 의회 밖에서는 노동계급을 동원해 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식으로 결합되면 권장을 것이라는 모호한 공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마르크스가 파리코뮌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따라, 노동계급은 혁명 과정에서 의회를 포함한 기존 국가 기구를 분쇄하고 이를 작업장과 노동자 공동체에서 선출된 노동자 평의회에 기초한 노동자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이 《좌익공산주의 — 유아적 혼란》(이하 《좌익소아병》)에서 주장했듯이, “의회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 소비에트만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의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 중추가 아니라는 것, 즉 진정한 권력은 대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의 이사회와 국가 관료 기구(군대, 사법부, 경찰 등의 우두머리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의회라는 무대는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 활동에서 중심이 아니다. 레닌을 다시 인용하자면, “대중 행동(예컨대 대규모 파업)이 의회 활동보다 언제나 — 혁명 또는 혁명적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혁명가들은 왜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가?

첫째, 선거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곧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선거와 그 결과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자 일종의 기계적 경계결정론이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했어도 그리스를 변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노동계급이 치러야 하는 전투의 여건을 상당히 바꿔 놓았을 수는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실질적인 차이들에 무관심해선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개혁들(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퇴직 연령 등)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둘째 이유는 선거가 노동계급의 의식을 둘러싼 전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의회에 대한 믿음이나 환상이 없는지 몰라도 수많은 노동 대중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치적 논쟁이 주목을 받는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런 시기를 사회주의자의 개입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정치 활동 영역을 개혁주의자,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파시스트에게 내어 줄 처지가 못 된다. (특히 파시스트는 언제나 의회 투쟁과 비의회적 투쟁들을 결합해 왔고, 흔히 매우 효과적으로 그렇게 했다.)

셋째, 혁명가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다면, 그들은 ‘민중의 호민관’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위한 ‘확성기’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노동 대중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운동에 대중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이런 단계의 투쟁에 이르러 본 적이 없다 보니 흔히 잊곤 하지만) 레닌은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의회 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의회에 맞선 투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정치인들은 “의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노력하면서 “의회 해산이라는 다가올 임무에

서 소비에트의 성공을 위해” 활동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사실상 모든 진지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 특정한 상황들이 있다. 언제인가? 그런 질문은 그 성격상 전술적인 것이고 늘 구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답할 수 있다. 즉, 어떤 절대적 규범을 만들 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역사에 근거해 볼 때, ‘적극적인’ 보이콧이 정당한 예외적 상황은 주로 압박한 봉기를 준비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혁명가의 선거 참여 형태는 구체적 분석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 이는 당면 선거 제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전술적 문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은 자기 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최고의 선택이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불행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은 허약해서 이런 선택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 보잘것없는 표를 얻을 후보를 출마시켜 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극좌파 후보들이 서로 대립하며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표를 분산시켜 좌파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인터아시아’의 일부로서 그랬던 것처럼, 또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사회주의연합’, ‘리스펙트’, TUSC(노동조합 · 사회주의자 연합)와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보통은 혁명가들이 좌파 연합의 일부로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종 필요한 그러한 연합과 동맹은 언제나 고유하고 복잡한 전략적 · 전술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이런 선거 운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의 큰 틀에서 제시할 수는 있다. 1) 가능한 한 승리를 목표로 진지하게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한다. 2) 이런 목표를 위해 추상적인 최대 강령이 아니라 광범한 노동 대중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요구들을 내세워야 한다. 3) 그러나 당선에만 목을 맨 기회주의적 타협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대중중수적인 법질서 캠페인이나 외국인 혐오증,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따위의 타협이 그런 것이다. 4) 선거 운동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투쟁의 (부차적인)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후보를 낼 수 없는 때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

첫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국회의원 · 대통령이 실제로 사회를 운영한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른 근거에 따라 어떻게 투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후보자의 ‘개인적’ 특징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출발점은 결코 될 수 없다. 좌파 진영의 주요 후보가 영국의 조지 겔로웨이, 미국의 랄프 네이더, 이집트의 함딘 사바하라는 이유로, “나는 이 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야. 믿을 수가 없거든. 심지어 그가 3년 전에 저지른 이런저런 못된 짓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주장이 아니다.

둘째,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 즉 포괄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비판적 지지라는 개념이 핵심이다.

레닌은 《좌익소아병》에서 영국 노동당 지도자들의 초기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헨더슨 일파, 클라인스 일파, 맥도널드 일파, 스노우드 일파들[1920년대의 노동당 지도자들 — 몰리뉴는 가망 없을 만큼 반동적이다. ... 그리고 그들이 권좌에 오르면 틀림없이 사이데만 일파와 노스케 일파(독일 사회민주당원들로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살해한 독일 혁명의 배신자들 — 몰리뉴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모두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혁명에 대한 배반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혁명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 혁명가들이 이 신사 양반들께 일정한 의회적 지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을 두고 레닌이 램지 맥도널드 또는 사이데만과 노스케의 지지자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칭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구체적 정치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찰해서 투표의 정치적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레닌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모든 세력,

집단, 정당, 계급, 대중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투표 지침이 바람이나 견해들에 의해, 한 집단이나 당 혼자만의 계급의식과 전투성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안 된다.”

내 견해로는 이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세 가지 요소가 특히 중요하다. 1) 관련된 정당과 후보의 계급적 성격 2) 이들 정당과 후보에게 대중이 보내는 지지의 계급적 · 정치적 성격 3) 해당 선거에서 특정한 투표 지침 또는 특정한 선거 결과가 불려올 정치적 파장.

만약 이 모든 질문의 답들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불행히도 세상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레닌이 설명했듯이, 노동당과 사회민주당 들은 단순한 자본가 정당도 단순한 노동자 정당도 아닌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 또는 ‘부르주아적 노동자 정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특징은 친(親)자본주의적이고 노동조합(특히 노동조합 관료)과 유기적 연계를 맺고 있는 지도부를 활용해 노동계급에게 대중적인 선거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 위에서 레닌은 영국 부르주아지의 주요 정당들(예컨대 보수당과 자유당)에 맞서 영국 노동당에 투표로 지지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와 변형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블레어, 브라운, 밀러반드, 올랑드, 파판드레우 등(영국, 프랑스, 그리스의 사회주의자들만큼 노골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이지는 않은 지도부를 둔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있다. 그리스의 시리자나 프랑스의 좌파전선이 그렇다. (시리자가 훨씬 더 급진적이긴 해도 영국 노동당에 견줄 만한 노동조합 기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제3세계 국가’, ‘개발도상국들’,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유럽이라면 사회민주당들이 차지했을 정치적 공간을 이런 나라에서는 반제국주의적 수사(때로는 투쟁)로 노동계급, 빈민, 농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민족주의 또는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정당들은 실천에서는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ANC에서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그리고 시기를 달리해서 팔레스타인 PLO와 하마스

▶ 13면으로 이어짐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마르크스주의 이론자 (이리시 마르크스주의 리뷰)의 편집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사회 변혁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오늘날 자본주의를 바꾸려는 젊은 반란자들 중 일부는 모든 종류의 집중주의적 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상(자율주의, 아나키즘 등)에 매력을 느낀다. 이들은 운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리더십, 한국말 윙킴으로 '지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물론, 그 극단적 형태를 수용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비민주적 억압기구와 껌데기뿐인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이런 '연성 자율주의'의 한 배경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는 없고 집중주의만 있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에서는 모든 당원이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노선에 복종해야 한 반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그 어떤 엘리트도 대신할 수 없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과정이므로, 민주주의는 필수적이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그 조직은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전술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는지 입증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낱말이 변하는 현실 속에서 원칙을 적용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새롭게 찾아 나가는 활동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토론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더불어 집중주의도 필요하다. 노동자연대다함께와 같은 사회 변혁 조직은 민주집중제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이것은 완전한 토론의 자유



2007년 이랜드 점거 파업 당시 분임토론하는 노동자들. 노동계급 투쟁의 본질 그 자체에 민주주의와 집중주의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에 이어서 분명한 행동 통일이 뒤따르는 것이다.

집중주의적 조직과 리더십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무엇을 위한 조직이고, 집중이며, 리더십인가가 중요하다.

노동계급 투쟁의 본질 그 자체에 맹아적으로 민주주의와 집중주의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이윤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노동계급의 힘은 그 집단성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뭉치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공정만 떼 간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이룰 수는 없다.

가령, 노조가 파업과 피켓팅(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해 파업 파고를 막는 행위)을 하기로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 후에도 일부가 그 결정을 무시한다면 파업의 효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때, '파업하지 않을 자유'는 '파업을 파괴할 자유'일 뿐이다. 따라서 투쟁이 승리하길 바라

는 사람이라면 노조의 규율을 지지해야 한다.

단지 파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 전반에도 이런 집중주의는 필요하다. 우리는 자본가 권력과 노동자·피억압자의 민주주의가 사이 좋게 공존할 수 없다고 본다. '정리하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자본가들의 이윤과 이를 수호하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에 도전해야만 가능하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요구는 단지 "권력 반대"가 아니라, "자본가 권력을 노동자 권력으로, 자본가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집중주의가 없다면 우리는 고도로 집중된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 권력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어렵고, 우왕좌왕하거나 각자 다른 실천을 하느라 아무것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혁명 조직은 활동가들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서로 문제 삼지 않는 느슨한 연방적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반면 역사적으로 '아나키즘의 아버지' 프루동 같은 '무한 개인 자유 옹호론자'들은 노동계급의 조직된 세력을 혐오했다. 그들이 옹호한 자유는 노동자 계급이 집단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자유가 아니라, 조직의 민주적 결정조차 무시하는 개인적 '자유'였다. 그들은 정치적 자유를 옹호한 게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자유'를 원했다.

이렇게 조직과 리더십에 극단적 거부감을 갖는 개인주의자들이야말로 엘리트주의적이다. 그들은 어떤 집단적인 민주적 결정에도 종속받으려 하지 않고, 흔히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나 다른 운동 참가자들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

보고와 소통

행동 통일 없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적이지도 않다. 실컷 토론을 통해 결정해 놓고 행동 통일이 따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적 결정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 토론에 따른 결정을 함께 힘을 모아 실천해 보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옳았는지 입증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배울 수도 없다.

또, 그저 각자 행동하면 그만일 뿐이라면, 소통과 피드백은 필요 없게 된다. 그래서 집중주의적 조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고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보고가 '아래'에서 '위'로만 일방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혁

명 조직에서 보고는 상호 소통을 위한 수단이며, 이것은 여러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

보고 없는 조직은 혈관 없는 신체나 다름없다. 자신의 활동과 운동 관련 정보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조직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다른 운동 참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런 일이 없다면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의 견해가 올바르게 입증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지도 않다.

'자율' 사상은 지도가 일방적이고 관료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지도는 충분히 쌍방향일 수 있다. 오히려 민주집중제 하에서는 조직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자신의 실천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지도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곧 자신의 과제가 된다. 그래서 혁명조직의 활동가들은 토론과 실천 모두에서 능동성과 자주성을 미덕으로 여긴다. 리더는 가만히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낱말이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받아야만 한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 때문에 혁명조직에서도 수동성과 부문주의, 형식주의가 싹을 수 있다. 따라서 혁명조직의 회원들은 민주적 토론과 그에 바탕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낱말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개인주의적 조직관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다.

최미진



레온 트로츠키의 지음, 책갈피, 2008쪽, 9천 원

신간 서평 《당과 계급: 노동계급에게는 어떤 정치조직이 필요한가?》

혁명조직이 사회 변혁의 필수적 무기인 이유

경제 위기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 노숙자가 10만 명이나 되고, '잘 나가는' 유럽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집트,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전진하고 승리하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조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 의문을 품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정당이나 정치조직 자체를 의심한다. 1퍼센트만 대변하는 보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당을 바라보는 눈도 굵지 않다.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운동을 통제하고 소련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거래하는 데 운동을 이용했던 기억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국주의 전쟁에

참전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경험 때문에 정당 거부 정서가 팽배하다.

한국에서도 2008년 촛불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에서 정당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게다가 최근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과 이후 분열로 인해 진보 정당에 대한 실망과 환멸도 정치조직에 대한 거부감에 일조했다.

불세비키

《당과 계급》은 운동 내에서 제기되는 정치조직, 지도에 대한 이런 혼란 오해와 수많은 편견에 도전한다.

이 책에 실린 글 다섯 편은 모두 한편으로는 노동계급 투쟁과 사회주의 조직 사이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경험, 스탈린 체제가 등장한 방식과 이유, 그 과정에서 불세비키당의 구조가 한 구실을 설명한다.

트로츠키의 “계급, 당, 지도부”는 1936~39년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트들이 승리한 이유를 설명한다. 스페인 노동계급이 패배했다는 생각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왜 잘 조직된 혁명가들의 조직이 혁명의 승리에 필수불가결한지를 설명한다.

토니 클리프가 쓴 “트로츠키의 대리주의론”은 혁명적 엘리트가 노동계급을 대신한다는 ‘대리주의’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불세비키가 노동자 대중정당에서 스탈린의 반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바뀐 것은 혁명의 고립 때문이었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또 대리주의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노동계급의 독립적 행동뿐이라고 결론짓는다.

크리스 하먼의 “당과 계급”, 던컨 헬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향해”는 중

앙집권적 조직은 관료주의를 낳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중앙집중적 당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1917년 이전의 당과 계급”은 독일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당 개념에 대한 논쟁 글이다. 캘리니코스는 당 건설에 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태도에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심도 깊게 분석하며, 독립적 혁명정당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모두 20세기 국제 노동계급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변혁 정당과 노동자 대중의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이용해 “혁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투사들에게 혁명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당과 계급을 분석한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승민

▶ 12면에서 이어짐

도 이런 사례에 포함된다.

때로는 셋째 요소인 투표 결과의 정치적 파장이 첫째·둘째 요소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프랑스 대선 2차 투표에서 우익 시라크와 파시스트 르펜이 결선 투표에서 붙었을 때가 그랬다.

평상시라면 그 어떤 사회주의자도 시라크에게 투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르펜의 승리가 재앙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그만큼이나 분명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갈렸다. 그러나 시라크는 79퍼센트 투표율에 82퍼센트 득표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계급의식적인 부위를 포함한 프랑스 노동자의 압도 다수가 시라크에게 투표했음을 보여 준다.

좌익소아병

혁명가와 선거라는 문제 전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전통 내의 가장 훌륭한 일반적 지침은 내가 앞서 인용한 레닌의 《좌익소아병》이다.

당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많은 신생 정당들(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안에서 상당히 강력했던 ‘좌익’ 공산주의 경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쓴 이 책은 전략·전술의 탁월한 안내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이라면 반드시 탐구해야 마땅하다. 《자본론》을 읽지 않고서 진지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익소아병》을 읽지 않고서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러하다. a) 모든 타협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진지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아니다. b) ‘반동적’ 노동조합을 포함해 노동조합 안

에서 활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c) 선거에서 경합을 벌이고 부르주아 의회에 개입하는 것은 의무다. d) 우익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중과 한편에 서기 위해, 개혁주의자들을 집권하게 함으로써 대중 앞에서 개혁주의를 폭로하기 위해, 믿지 못할 개혁주의 지도자에게서 평조합원 노동자들을 전취하기 위해, 노골적인 자본가 정당에 맞서 사회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e) 혁명 지도부의 기예에는 단지 혁명적 전위만이 아닌 노동계급의 다수를 전취할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

은 대중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한 발짝 앞선 곳에서 접점을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자본론》이 마르크스주의적 경제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해서 오늘날의 경제에 대한 탐구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저 레닌의 저작을 독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급과 정치 인사들의 세력 균형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출처 존 롤리뉴의 블로그
<http://johnmolyneux.blogspot.kr/> | 번역 김용민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28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건국대 박근혜 방문 항의 시위

박근혜의 ‘불통’ 본색이 드러나다

11월 15일 박근혜가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한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를 방문했다.

건국대는 1986년에 10·28 항쟁으로 독재에 맞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건국대에 박근혜가 조용히 방문하게 둘 수는 없었다.

박근혜는 지금도 투표 시간 연장을 거부하고 MBC 김재철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는 아직도 목마른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최근 매우 기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쌍용차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면한다. “국민대통합”을 외치지만 박근혜가 대변하는 것은 1퍼센트일 뿐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 모임 회원들은 다른 학생 단체들과 함께 박근혜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정리한 리플렛 1천 장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학내 단체 12개에 함께 항의하자는 제안을 보냈고, 기자 1백여 명에게 보도자료를 보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지지를 보냈다. 우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에는 댓글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 토론이 벌어졌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내용의 리플렛을 나눠 줄 때는 가던 길을 돌아와서 받아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신도 박근혜에 반대한다며 구체적 행동이 언제, 어디서 있는지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당일 우리가 팻말 시위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은 자신이 직접 쓴 대자보를 들고 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대자보도 함께 게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항의 시위를 준비하는 내내 어떤 방식이더라도 지지를 보내고자 하는 학생



박근혜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경찰 등을 동원해 자신을 반대하는 학생과 쌍용차 노동자 등을 폭력적으로 밀쳐냈다. 이것이 박근혜 식 '소통'이다.

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부터 우리는 “유신 독재 계승자 환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는 아직도 목마르다”,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기만 행위 중단하라”, “1퍼센트 대표자, ‘국민대통합’ 기만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팻말 시위를 시작했고, 학생들이 주변에 모여 우리의 시위를 지켜봤다.

한 학생은 “나도 함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우리를 응원했다.

폭행

그런데 우리가 팻말 시위를 하던 도중 박근혜 지지자들이 몰려와 “너희가 유신 독재를 아냐”며 우리의 팻말을 찢어 찢고, 우리를 둘러싸며 밀고 입을 막는 등 폭행을 가했다.

나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건국대에서 건국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신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박근혜 지지자들이 우리를 폭행할 때 경찰이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아

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시민이 경찰들에게 항의했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경찰은 박근혜 경호가 자신들의 임무라며 충돌 과정에서 강탈된 내 휴대폰을 찾는 데도 협조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입장할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기습적으로 항의 시위를 했다. 우리도 함께 박근혜를 폭로하는 구호를 외쳤다. ‘소통’하겠다고며 대학을 찾은 박근혜는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과 우리를 건물 밖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냈다. 강연에서도 “학생들과의 소통”이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직접 질문도 하지 못했고, 민감한 질문들은 사전에 제외됐다. 박근혜가 예쁘니, 나경원이 예쁘니 같은 역겨운 얘기 때문에 학생들은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박근혜에 맞서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항의 시위 때문에 도망치듯 대기실로 들어가야 했다.

박근혜가 어디를 가더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모두 함께 투쟁하자!

김무석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 모임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투쟁

투쟁과 학생들의 연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청소·시설관리 노동조합(공공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이 만들어지고 보름이 지나도 학교 당국과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 노동자들이 규탄 행동에 나섰다.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학생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전을 진행했고, 11월 6일에는 규탄 집회를 할 계획이었다.

이런 운동의 압력은 곧바로 성과로 나타났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사측은 그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제까지 두 번의 요청에도 나오지 않던 학교 사무처장이 11월 6일 집회가 예정된 당일 면담에 나와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5개 늘리고, 안정적인 교섭을 위한 기구인 ‘노동안전실태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용역회사와 학교 측도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사무처장은 교섭 자리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면 이런 간담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면담 직후에 예정돼 있던 집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로 면담이 이뤄지는 대학 본부 로비를 서울시립대 노동자들뿐 아니라 연대하러 온 다른 대학의 노동자

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득 메우고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섭이 시작되면서 예정된 집회는 조합원 총회로 대체됐지만 이런 투쟁의 압력 때문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교섭에 나온 용역회사 이사는 여전히 사장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 학교 당국은 아직 악질 원청 관리자 교체와 인원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앞선 승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장님께 편지쓰기’와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기’ 등 학내 홍보전을 계획하면서 투쟁을 이어나가려 한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동참과 지지도 늘고 있다. 지난 홍보전 이후에 새로 당선한 차기 총학생회 등이 향후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는 좁은 취업문과 높은 청년 실업의 벽에 허덕이면서 “눈높이를 낮춰”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만족하라고 강요받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서울시립대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오동환 서울시립대 학생

국민대 외부 강좌 수강료 횡령 의혹

학교 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부실’대의 낙인이 찍힌 국민대의 명예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얼마 전 SBS 보도를 통해 외부 강좌(스키나 스노우보드, 골프와 같이 학교 외부에서 이뤄지는 체육교과목)를 지도하는 교수들이 외부 강좌 대행업체들과 유착하고 학생들의 강좌비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만 원이 수강비라면 그중 장비비를 빼고 2만~3만 원이 남고, 이를 대행업체와 교수가 반반씩 나눠 갖는 셈이라는 것이다.

SBS 기자가 제공한 정보를 보면, 체대의 조한범 교수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경찰 조사도 상당부분 진행돼 충분히 검증이 됐다는 것이다. 조한범 교수는 올해 1학기에 스키와 윈드서핑 강좌를, 2학기에 수상스키와 스노우보드 강좌를 맡았다.

언론에서 제공한 정보가 매우 구체적인 만큼 조한범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산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까지 저질러졌다면 정말이지 파렴치한 일이다.

학교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리고 2학기에 조한범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수상스키와 스노우보드의 담당교수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사 혹은 학교 자체 진상조사 결과 조한범 교수가 수강료를 횡령한 것이 맞다면 즉각 해임해야 한다.

현재 외부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수강료를 내기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학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학점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미 수강료를 낸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더 저렴한 수강료를 책정해야 한다.

‘부실’대, ‘표절’대, ‘ARS 오천 원’도 모자라 이제는 수강료 횡령 사태까지 국민대에 터졌다. 이번 일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가 크지만 이와 함께 학생들을 돈벌이로 보는 대학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2년이 국민대의 ‘잃어버린 1년’이 되지 않도록 학교 당국은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부실’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요구인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권혁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

이주 아동을 수감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지난 10월 4일,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몽골 청소년이 시비에 휘말린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하고, 심지어 출입국 사무소에 넘겨져 단 3일 만에 추방됐다.

몽골로 돌아가는 친구의 환송회를 하던 중, 한 무리의 한국 청소년들이 ‘몽골 새끼’라며 모욕을 준 것이 발단이 돼 벌어진 싸움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은 오히려 싸움을 말렸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다. 경찰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몽골 청소년들을 붙잡으려고 이 청소년을 볼모로 이용했다. 경찰은 이 사소한 싸움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새벽까지 몽골 청소년들을 심문했고, 이 학생에게는 통역을 강요하고 밤새 잠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불법체류자’라며 수감을 채워 서울출입국사무소로 보내 버렸다. 이 청소년이 한국에서 8살부터 지금까지 10년을 살아 왔고, 다음 날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이며, 게다가 미성년인 점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다. 출입국 사무소 측은 이 소년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추방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고,

보호자의 면회도 거부한 채 수감을 채워 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냈다.

결국, 이 소년은 출국을 원치 않았지만 수감이 채워진 채 끌려가 비행기에 태워졌다. 정부가 ‘한국에는 인종차별 범죄는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지만, 이 사건의 전 과정은 바로 경찰과 출입국사무소가 ‘인종차별’ 공범임을 보여 준다.

인종차별

이 소년은 몽골어 글자를 몰라 현지에서 학교에도 다닐 수가 없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떨어져 이제는 낯설기만 한 몽골에서 적응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 이 모든 일 이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벌어진 일이다.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후, 11월 13일 이주운동단체들은 이 소년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법무부의 답변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한마디뿐이다.

사실, 이런 비인간적 일은 수년 전까지는 비밀비재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에 부딪혀 최근에는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미성년 이주민에 대해서는 함부로 추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는 이전 그런 ‘관례’조차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 2007~2009년 동안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 아동 48명이 추방됐다.

이 사건은 경찰과 출입국 직원 몇몇의 잘못된 대처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동안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난민 등 모든 이주민의 권리가 계속 후퇴해 온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후퇴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권리가 박탈되고,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이주민의 영주권·국적 취득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국적법 ‘개정’(영주권 전치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국적법 ‘개정안’에는 난민과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막는 극도의 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 이주운동 진영 내에는 이 모든 개악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항의 운동의 확대가 빼앗긴 이주민들의 권리를 쟁취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 소년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라는 항의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정원

독자토론광장

11월 28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목소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9일 성공적으로 1차 파업을 벌인 이후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는 차별받지 않겠다며 용감하게 일어난 학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응원을 등에 업고 싸워 이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의 군서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교조 조합원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국어 교과서에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차별받아서서는 안 된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참지 말고 항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1월 9일]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실천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산교육의 현장에, 제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싸움이 결코 여러분만의 싸움이 아니라 온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것임을, 그래서 응원하는 이가 많음을 말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일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학교에서는 무려 80여 업종, 20만 명, 전체 학교 구성원 네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 준 밥을 먹고, 그중 다수는 아마 비정규직이 될 겁니다.

아마도 오늘 파업하는 동지들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여러분의 파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도 명절 수당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10년이나 1년이나 똑같이 1백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안전 보장도 없는 것인지, 여러분과 선생님들은 태풍으로 집에서 쉬지만 그분들은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장, 교감 샘의 떡 심부름을 하면서 억울하단 소리도 못하고, 연말이면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끝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화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 다. 제가 수업하는 반의 거의 모든 학생들과 학교의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흔쾌히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무려 2백50여 명입니다!

산 교육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연대 메시지를 보내 주기도 했습니다.

‘학비 노동자 여러분, 학생들이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학교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학비 노동자 분들의 파업과 투쟁을 지지합니다. 파이팅!’

제가 속한 전교조도 이미 전국과 각 시도 단

위의 조직에서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여러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응원 속에서 투쟁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싸워 이겨 주세요.

저희 교사들도 교단에서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평등과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파업으로 보여 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교사들과 여러분이 함께 교육하고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에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박태현 경기도 시흥시 군서고 교사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군대보다 더한 서열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

학교장이 무서워, 행정실장이 무서워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

이제 그들도 두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학교 현장에서 몇몇이 교육의 주체임을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문해경



성공적이었던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차 파업

눈물을 머금고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차마 눈치가 보이고, 무섭고, 언제 나 같은 거 하나 쬼은 없어도 된다는 교육자들의 생각과 눈빛에 당당히 요구할 수도 없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줄 끊길까 무서워서 감히 파업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신문과 뉴스에 나온 저의 분신 같으

신 분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 행사와 일들로 같이 바쁘게 일해도 누구는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 받아 끼리끼리 밥도 먹으려 하지만, 눈치 받으

며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하는 처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육공무직이라도 된다면, 우리를 인간으로 대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무시와 편견이 사라지길 눈물을 머금고 기대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경기지회
2012 대선과 진보진영의 과제
연사 : 김문성(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도보 10분, 매통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8700-4647

서울 서부지구
대선 전에 살펴보는 —
경제 위기와 대선, 대선 이후
연사 : 최일봉(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진보대연합, 2012년 선거, 그리고 좌파》(노동자연대다함께),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책갈피)의 저자)
일시 : 11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 교육장(공간 여성과 일,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SC제일은행 오른쪽 골목)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7725-9823

서울 중북부지구
2012 대선과 진보의 과제
연사 : 김문성(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성대 예뮬센터 804호 (해와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9820-5698

11월 24일 4차 범국민대회에 함께 모여서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싸우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겼다. 김정우 지부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루하루 버티나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결정조차 가로막고는, 도리어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을 박대하며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상황과 심정을 이렇게 전한다.

“쌍용차 문제는 국정조사 사항이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의 얘기를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죠.

“새누리당 당론인지, 박근혜의 입장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돌아가서 기다리면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했어요. 메달라가는 김정우 지부장과 추위 속에서 비닐 하나 덮고 집단 단식 농성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냥 나올 수 없었어요.

“난방조차 끊은 건물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오기로 닳새를 버렸죠. 결국 되돌아온 답은 새벽 4시에 무자비한 연행이었어요. 새누리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 중인 박호민 교선부장은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대한민국’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선거에서조차 재벌들 편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박근혜가 당선된다면 끔찍할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쌍



3차 범국민대회에서 공연하는 쌍용차 해고자 자녀들 정리하고 철매를 위한 쌍용차 노동자 들의 외침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운운하는 박근혜의 위선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용차 노동자들이 ‘그림자 투쟁’으로 박근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버르는 것은 정당하다.

민주당이나 안철수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들은 새누리당 탓을 하면서, 정작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국회 회기를 넘기려는 수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싸움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재벌에 관한 것이지 노동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

동자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투쟁이 사회적 연대를 넓혀 온 것이다.

예수살기 최현국 목사는 기독교계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다.

함께 살자

“23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종교계에서는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쌍용차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모든 피해를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연대 확산은 지난해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의 승리를 떠올리게 한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유재선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한진 투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한진 투쟁에 ‘물뽕’하자고 결정했어요. 평택에서 부산까지 ‘천리길’을 하루 30~40킬로미터씩 걸었어요. 한진 투쟁이 승리하면 그 다음은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쌍용차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싸우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싸워서 이기려면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도 중요하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실장은 금속노조의 구실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쌍용차는 엄청난 노동감도 속에서 마구잡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금속노조가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막아낼 수 있어야죠.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냐는 계급 역관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11월 24일(토)에 열리는 쌍용차 4차 범국민대회에는 넓어진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한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확대 간부와 조합원들을 많이 조직해야 한다.

쌍용차 김남섭 사무국장은 함께 모여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노동자는 굶어가면서, 두 명의 노동자는 20미터 높이의 철탑 위에서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노동의 현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더욱더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호소한다. “싸우는 자들이 희망임을 믿는 모두가 함께 나서자!”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함께하자!

유병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싸우는 자들이 희망이다”

11월 24일(토) 오후 4시 서울광장

아랍 혁명의 공지에 몰려 발악하는 이스라엘

‘테러국가’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조나단 마운더 영국의 사회주의자

11월 14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과 포격을 퍼부어, 선출된 하마스 정권의 최고군사령관 아흐마드 알 자바리와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살해된 사람들은 오마르 알 마샤라위(생후 11개월), 레난 유시프 아라파트(3살), 모하메드 쿠사이(18살), 예삼 아부 메자(19살), 헤바 알 마샤라위(19살) 등이다.

그러나 서방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맹무새처럼 따라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외과 수술 같은 정밀폭격’을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헛소름이다.

미국은 ‘우리 이스라엘 동맹군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가 2009년 카이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늘어놓았던 미사여구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하마스의 로켓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이집트가 중재한 2008년 6월의 정전협정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인정했

듯이, 하마스는 2008년 6월 이후 단 한 발의 로켓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8년 11월 4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침공해 하마스 대원들을 살해했다. 그 한 달 뒤 이스라엘은 ‘캐스트 리드’ 작전을 시작해 팔레스타인 민중 1천4백 명을 살해했다.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해 왔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미국의 지원으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국가와 공격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민중은 전혀 똑같지 않다. 가자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붕만 없는 감옥이다.

경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의학잡지 중 하나인 《랜싯》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끊임 없는 감시, 봉쇄와 고립이라는 집단적 처벌, 무단침입과 도청, 여행·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제한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렵다” 하고 보고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보면,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자국의 정책이 “가자 경계를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아이언 돔” 요격시스템으로 팔레스타인 수제 로켓을 추적하고 차단한다. 이스라엘

국민은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다.

가자의 팔레스타인 민중은 또 다른 ‘캐스트 리드’ 작전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대 물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과 오늘날은 다르다. 바로 아랍 혁명이 있다.

가자지구로 통하는 라파 국경을 통제하는 이집트에서는 겹겹이 친이스라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쫓겨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무함마드 무르시는 이스라엘에 맞서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시리아 혁명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에 권력 공백 상황이 발생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해졌다. 레바논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권단체 ‘요르단 노동감시’는 요르단에 전례 없는 수준의 ‘노동자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파업과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아래로부터 저항들이 이스라엘이 계속 활개치도록 내버려 뒀던 중동의 모든 썩은 정권들을 위협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 번역 최용찬



11월 16일 팔레스타인 폭격 중단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한국에서도 열린 이스라엘 규탄 행동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규탄 목소리와 행동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11월 16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경계를 넘어,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등이 함께 이스라엘의 폭격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격이 개시된 지 하루 만에 열렸음에도 50여 명이 모여서,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가로막고 잔인한 폭력으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이 공식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을

편드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란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도발하는 것은 아랍혁명 후 불리해진 정세를 타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이스라엘 대사관은 항의서한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경찰은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가로막기도 했다.

김영익